

韓·美·日 국채금리 치솟자 증시 흔들… 기업 이자부담 커진다

美 30년물 5.31% 19년 만에 최고권
韓 10년물 4.3%대·日 2.93% 기록
전쟁발 에너지값 물가 전반으로 확산
재정적자·국가부채 금리 밀어올려
AI 기술주 중심 위험자산 조정 우려
차입비용 늘며 수익성 악화 전망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누적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임금·식품·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2차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각국 금리를 일제히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대출도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국채 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의 악한 고리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된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세 지속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5bp(1bp=0.01%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6월 기록한 5.44%에 근접한 것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다.

장기 금리 급등 배경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감,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 등도 지목된다.

한국 국채 금리도 뛰고 있다. 금융투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뉴시스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채권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는 이날 연 4.38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말 3.385%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난 24일에는 연 4.447%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웃한 일본도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3%까지 상승했다. 이는 199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채권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우려하던 일본이지만, 중동 전쟁의 여파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물가(CPI)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국·독일 등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누적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임금·식품·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2차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수비드라 라자파와 금리 전략가는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슷하다.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원인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의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의 집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주요국 금리 수준은 미·이란 전쟁 이전 전망보다 최대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

우 현재 연 3.75%(상단 기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고, 2027년 말에도 연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BE는 한국은행이 전 세계적인 통화 완화 흐름에서 벗어나 내년 상반기까지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2026년 말 연 3%로 오른 뒤 2027년 말에는 연 3.5%까지 상승하고,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이다.

◆기업 자금조달 부담 우려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한 주식시장의 낙관론도 결국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래에 높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급등했던 AI 기술주들이 특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코스피는

1.55% 하락했다. 지속된 AI 거품 우려와 치솟는 국채 금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일본 나케이225는 2.54% 하락 마감했다. 전날 뉴욕 3대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금리가 다른 국가 금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AFH 웰스 매니지먼트는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빌려 일본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이는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를 0.02~0.03%포인트 가량 밀어 올리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엔화 약세가 위안인 상황이다. 카렌 라이히고트 피시먼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일본의 재정 부담과 높은 미국 국채 금리, 일본은행(BOJ)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엔화가 앞으로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치솟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에선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기업도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 가능성이 크다. 이자 비용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연금개혁 다시 시동… '하후상박·연기금 운용' 쟁점 부상

국회 연금 관련 법안 13건 상정
리밸런싱 유예 놓고 여야 이견
지역연금 수급 제한 완화 논의
기초연금 개편안 이달 말 발표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이후 멈춰 있던 연금개혁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하반기 국회 들어 13건의 연금 관련 법안이 입안됐고, 분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역연금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에 속도를 낸다. 18일 의인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연금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6건(중복 포함),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5건 입안됐으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지역연금 관련 법안도 2건 상정됐다.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0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최대 쟁점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침에 대한 내용이다. 연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높은 수익률이 지속돼야 하지만, 최근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부양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던 만큼 적절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보건부장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관의 운용계획에 따라 자산 종류별 목표와 비중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가파른 가격상승으로 당초 운용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이 초과됐으며, 운용계획에 따른 국내주식의 대규모 매도 시 국내 주식시장에 가격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연기금의 당초 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난달 말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용 펀드가 아니다"라고 지

적한 바 있다.

빠르게 부상한 'ESG 공시' 관련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7월 29일 위원장 명의로 전반기 국회에서 입안됐던 7개 법안을 통합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안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투자 등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내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관련 기준을 신설해 연기금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지역연금 '역차별' 해소 논의

기초연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공무원·군인 등에 지급되는 '지역연금'과의 연계 및 형평성 문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

는 지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역차별' 및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달 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지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액을 중위소득 기준 50%의 노인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연금개혁' 박차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개혁의 지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도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저소득층 노인에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의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당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형태보다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최초 논의 당시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로 알려졌다. 최근 논의에서 중위소득 100%까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노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액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인상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소득 감소를 겪지 않도록 하면서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지적이 있었던 기초연금의 부부금액 제도도 지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은 줄이지 않되,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방침을 제시했고, 이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부의 기초연금액인 50만원이 가계마다 가치가 다른 만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